

自律화와 大學人의 反省



浦項工大學長 金 浩 吉

大學社會는 현재 우리나라 社會 全體에 불어 닥친 自律化의 바람 속에서 혼란과 아울러 陣痛을 겪고 있다. 오늘의 大學 問題는 大學만의 문제가 아니고 勞動 問題와 아울러 解決해야 할 國家의 重要 課題가 되고 있다. 최근 司法部가 심각한 自己反省을 이룩했지만 우리 大學人들도 自律化의 바람 속에서 자기 반성과 아울러 大學人의 責任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大學은 國立일 때는 國民의 稅金에 의하여, 私立일 때는 稅金을 면제받은 出捐金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公益機關이므로 社會나 國家의 統制를 받게 된다. 그러나 大學이 다른 어떤 機關보다도 運營에서 自律性이 강조되는 이유는 大學이 맡은 敎育과 研究하는 역할이 고도의 專門의 知性을 요하고, 大學은 바로 大學 運營의 專門家를 自體內에 가지고 있으며 大學人보다 더 나은 大學 專門家가 學外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大學에 自律權을 주는 것이 大學의 設立 目的을 實現하는 데 가장 效率적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植民地 社會에서는 볼 수 없었던 敎育熱이 光復 후에 폭발되면서 大學이 급격한 量的 팽창을 이룩하는 동시에 內實을 다지지 못했었다. 우리 大學人들은 社會에서 가해 오는 大學敎育의 量的 팽창에 대한 압력에 敎育의 質을 위하여 저항하는 대신 敎育熱에 傾乘하여 量的 팽창에 앞장을 섰으며 그 가운데서 많은 不條理를 內包하기도 했다. 學科의 新設과 學生 定員 증가를 경쟁적으로 이룩하여 大學 運營費의 登錄金 依存度를 深化시켰으며, 學科當 불과 5,6명의 敎授陣을 가지고서 學士뿐 아니라 碩·博士를 多數 배출시키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大學의 問題를 가장 잘 아는 大學人들이 大學 不實에 앞장을 선 셈이고 大學을 잘 알지 못하는 감독 관청이 오히려 大學의 質을 위하여 힘을 쓰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 大學이 스스로 內實을 기하고 不條理를 없앴다면 감독 관청의 규제가 적었을 것이며 政治的 理由로 가해 오는 壓力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敎權 상실의 1차적 責任이 大學人에게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지금 100 개 이상의 大學이 存在하고 人口에 대한 大學生 數가 世界에서 美國 다음으로 많다. 돈만 가지고 좋은 大學을 만들 수는 없지만 大學 運營을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며 內實을 기한다면 學生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經濟 水準으로 그 많은 巨大한 大學들의 質的 向上을 가까운 시일 안에 기대할 수 있는가를 自律化를 앞둔 이 시점에서 大學人들은 한번 反省해 보아야겠다.

隨材施教는 教育의 1차적 原理이다. 大學에 따라서 學生의 資質이 현격히 다를 때는 教育方式이 달라야만 한다. 社會가 公認하는 學士라는 學位를 가질 때는 學位에 相當하는 學力을 가져야하나 資質이 다른 사람을 똑같은 方式으로 教育해서는 안 된다. 백여 개 이상의 大學이 同一한 教科課程에 같은 水準의 教科書를 같은 時間에 같은 方式으로 教育하는 것은 教育의 1차적 원리에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결국 우리나라 大學의 問題는 大學의 質을 생각하지 않은 경쟁적 팽창으로 감독 관청의 劃一的 규제를 유인한 셈이고 그 위에 政治的 不條理가 겹쳐서 敎權의 不在現象과 教育不在 現象을 낳고 있는 셈이다.

차츰 이루어지고 있는 自律化 조치에 따라서 大學教育 正常化의 問題는 이제 大學人에게 맡겨질 것 같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大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大學人들이기 때문에 正常化를 위하여 自律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大學을 잘 알지 못하는 行政家에 의한 劃一的 규제에 비하여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많은 國立大學들의 質的 向上을 우리의 경제 규모로는 이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며 登錄金에 의존하는 私學들이 曄의 팽창을 自律的으로 억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私學에 대한 國庫 支援도 우리의 경제 규모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 모든 大學들이 각기 주어진 與件을 면밀히 검토하고 大學 運營의 內實化를 위한 多樣한 方案을 강구해야 하겠다. 登錄金은 올리되 敎授나 職員의 俸給을 올리지 않고 敎授의 數를 증가시키는 시행하기 힘든 政策을 택하는 大學도 있어야 하겠다. 敎授의 승급이나 승진이 研究보다는 教育에 대한 공헌으로 이루어지는 大學도 있어야 하겠다. 就業이 안 되는 學科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있어야 하겠으며 人事에 있어서 學緣과 地緣을 떠나 適任者를 초빙하는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總·學長의 任用에서 과거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直選制를 많이 택하는데, 學外에서 有能한 사람을 빌면서 초빙하게 되는 경우를 直選制를 택하므로 없애는 것이 大學發展을 위하여 옳은 일인지도 한번 反省해 보았으면 한다.

資本主義 社會의 원칙이 自由競爭이지만 大學은 公益機關이므로 경쟁 가운데서 감독과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는 大學評價認定制度가 강화되어 自律規制의 전통이 하루빨리 確立되어야 한다. 公益機關일 때는 自己가 自己를 規制하지 않으면 他人에 의한 規制를 받기 마련이다. 이제 大學 自律化를 앞둔 시점에서 大學人들은 大學教育의 內實化를 위하여 깊이 反省하는 등시에 뼈 아픈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
